

가평지역 현안 '산적'... 해결방안 모색

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현안 4건 관련 합동 토론회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윤태길(국민의힘, 하남1) 의원이 9일 가평군청 회의실에서 지역 도의원과 가평군의 지역현안 정책발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관광지개발, 지역 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업환경 개선 및 지원, 청소년 및 평생 교육 환경 개선, 상수원 보호구역 제한 완화 등 가평군 소관 현안 4건에 대해 합동 토론회가 진행됐으며, 도의회와 시·군의 협치를 통한 지역현안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의견을 나눴다.

임광현(국민의힘, 가평) 도의원은 "논의된 지역현안 4가지 과제는 가평 지역 뿐만 아니라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돼야 할 지역현안이다. 오늘 논의된 과제들이 의회내 5분발언, 도정질문, 관련 조례 개정, 중앙부처건의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공론화되고 정책에 잘 반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9일 임광현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평군청 회의실에서 가평군 지역현안 정책발굴 정담회를 가졌다. (사진=경기도의회)

윤태길 단장은 "가평군은 자라섬 재즈페스티벌 등 음악을 매개체로 축제와 문화예술의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곳"이라고 하며 "논의된 4건의 지역현안이 확실한 성과가 될 수 있도록 가평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도의회도 시·군과 함께 지역현안을 발굴하는 소통의 역할을 해 지역이 발전하고 도

민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지난 달 기준조직인 공약정책추진단의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을 확대해 제구성된 의회자체기구다. 올해 10월까지 31개 시·군과의 순회 정담회를 통해 도의원들과 지역 현안 해결 방안을 논의할 계

획이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 공동 단장인 윤태길 의원, 가평군 지역 도의원인 임광현 의원을 비롯해 최병길 부군수, 기획예산담당관, 관광과장, 농업정책과장, 건설과장, 환경정책과장, 평생교육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등 총 1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인창 기자

경기도 반도체 산업 인력양성 지원 목소리

서현옥 경기도의회 의원 반도체 정책토론회 열려

"실무형 비학위 과정, 인프라 확충 지원, 공동 플랫폼 운영 등 반도체 인력양성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민주당, 평택3)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반도체 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 반도체 산업현장의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경쟁력을 갖춘 인재 양성 발전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현장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됐다.

서현옥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박상윤 경기대학교 교수 '경기도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사업(경기도 반도체 공유대학)'을 발제했으며, 토론자로 강무성 원익IPS 인사본부장, 임지원 국제대학교 부총장, 장용규 수원하이텍고등학교 교장, 송은실 경기도 반도체산업과 과장이 열린 토론회를 이어갔다.

주제발표를 맡은 박상윤 교수는 경기도 반도체 산업의 기술인력 부족 현상을 설명하고 반도체 장비 인력양성을 위해 도내 대학, 고등학교, 반도체 기업들이 함께 참여하는 '경기도 반도체 공유대학'으로 인프라를 공유해 반도체 관련 중·중소기업에 안정적인 인력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강무성 인사본부장은 기업 현장에서 겪는 인력난 등 애로사항을 언급하며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고급인력 유치는 필수인력 인력 유출이 심각한 상황으로 반도체장비업에 대한 홍보 및 인센티브 등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임지원 부총장은 전문대학이 기초단체와 협력해 지역의 중장기 발전 목표에 부합하는 지역 내 특화분야 선정 및 교육체계를 연계·개편 등 지역기반 고등직업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용규 교장은 산업 수요에 맞춘 우수한 반도체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기관 및 실습시설 확충, 교육비 등 관련 예산 확대, 실무 전문인력 교사 양성을

위한 법률 점검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송은실 과장은 31개 시·군 및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실무형 비학위 과정, 인프라 확충 지원, 공동 플랫폼 운영 등 반도체 인력양성을 위한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끝으로 서현옥 의원은 "반도체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인력수급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경제노동위원회 의원으로서 반도체 관련 사업의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히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김인창 기자

의회 단신

화성시 봉담2-1초 설립 촉구

김희철 경기도의회 의원

신규 택지개발지구로 이사를 했지만 인근에 학교가 없어 먼 거리의 학교로 자녀를 통학시켜야 하는 학부모들이 피켓을 들고 직접 경기도 교육청 앞에 나섰다. 봉담2지구 내 봉담2-1초의 신설을 요청하기 위해서다.

봉담 2-1초는 봉담 2지구에 총 4539세대가 개발됨에 따라 도교육청은 36학급 1000명의 학생이 취학할 것으로 예상해 자체 투자심사를 거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심의안을 올렸으나 지난해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재검토 결정을 받아 현재는 학교 신설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다.

당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제시한 재검토 사유는 개발지구 내 추정학생 수 재산출이 필요하다는 이유였지만 변경된 봉담을 학생발생률을 계산해도 764명의 학생이 먼 거리에 위치한 수현초·봉담초로 배정받

고 있어 통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8일부터 도교육청 앞에서 연일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현장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희철(민주, 화성) 의원이 자리를 함께 하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 김희철 도의원은 "봉담 2지구에 속속 입주가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있어야 할 학교는 지금 당장 결정해도 3년 뒤에나 개교할 수 있는데 학교 신설 자체도 결정되지 못하고 있어 학부모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2월 교육부는 사업비 300억원 미만의 소규모 학교 신설은 도교육청이 자체 투자심사만으로 신설할 수 있도록 제도 변경을 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도교육청이 자체 기준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더 문제"라면서 "도교육청은 서둘러 소규모학교 신설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인창 기자



황대호 도의원이 9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긴급 정담회를 가졌다. (사진=경기도의회)

수원시 당수초 급식실 리모델링 추진

황대호 경기도의회 의원

"당수초 급식실 사업추진에 현재 26억4000만원이 확보된 상황에서 필로티, 연결통로 등 추가 예산 14억원 등 40억원 예산으로 추진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민주당, 수원3) 부위원장은 9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당수초등학교 운영위원회·학부모, 당수초등학교장, 수원교육지원청 및 경기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수초등학교 급식실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한 긴급 정담회를 개최했다.

학생 급식실이 설치되지 않은 당수초등학교는 지난해 체육관 건물을 활용한 식당 리모델링 추진이 이뤄지고 있으나 올해 1월 당초 1층 급식실 신축에서 1층 필로티, 2층 급식실 신축으로 변경해 달라는 운영위원회 및 학부모들의 요청이 있었다.

임정남 학교운영위원장 및 학부모들은 "1층 급식실 신축시 현재도 부족

한 학교공간을 활용할 수 없으며 저학년 학생의 동선이 길어진다"고 지적하고 "1층 공간 활용을 위해 필로티 공법 도입과 연결통로 설치를 통해 기존 건물과 2층 식당을 연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원교육지원청 학교급식 담당 팀장,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보건과장, 당수초등학교장의 급식시설 계획 변경 방안에 대한 설명과 토론이 이어졌다.

황대호 부위원장은 "1층 공간을 학생들의 교육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필로티 공법의 사업추진에 지난해 10월 개최된 정담회에서도 논의됐던 사항이며, 학교운영위원장 등 학부모님들의 강력한 변경 요구가 있는 상황에서 신속한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할 것"이라 밝히며 "당수초에서 신속히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재정투자심사를 신청할 경우 수원교육지원청과 경기도교육청이 협조해서 사업추진 일정이 단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인창 기자

전세사기 문제 해결 촉구나서

김대영 인천시의회 의원 현실성 있는 대책 등 촉구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은 9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인천시 전세사기 관련 대책

마련 촉구'와 관련해 폭넓고 현실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김대영 의원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전세사기 문제는 대책보다 책임 전가에 급급했고 정부대책안도 크게 실효성이 없고 무능하다고 발언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기에 요건을 완화해 지원 대상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책에 사각지대가 완벽히 없을 순 없지만 인천시의 많은 대책들이 오히려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며 "이를 통해 인천시는 무능한 탁상행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라도 피해자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한 대책안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추진해 달라"며 "이번

계기로 정치가 왜 존재하는지 시민들에게 증명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내고 시민의 주거 권리를 바로 세우는 데에 함께 해주길 바란다"며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서 인천시가 선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함에 의회가 앞장 서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안삼삼 기자

옥외광고 LED전광판

수도권 전역 광고주와 소비자를 직접 이어 드립니다.
서울시청·명동·동대문·종로3가·강남·홍대 등 다수지역 송출

문의 032)508-0006

일간경기 영상사업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337, 1147~1150호(청천동, 제이타워3차)